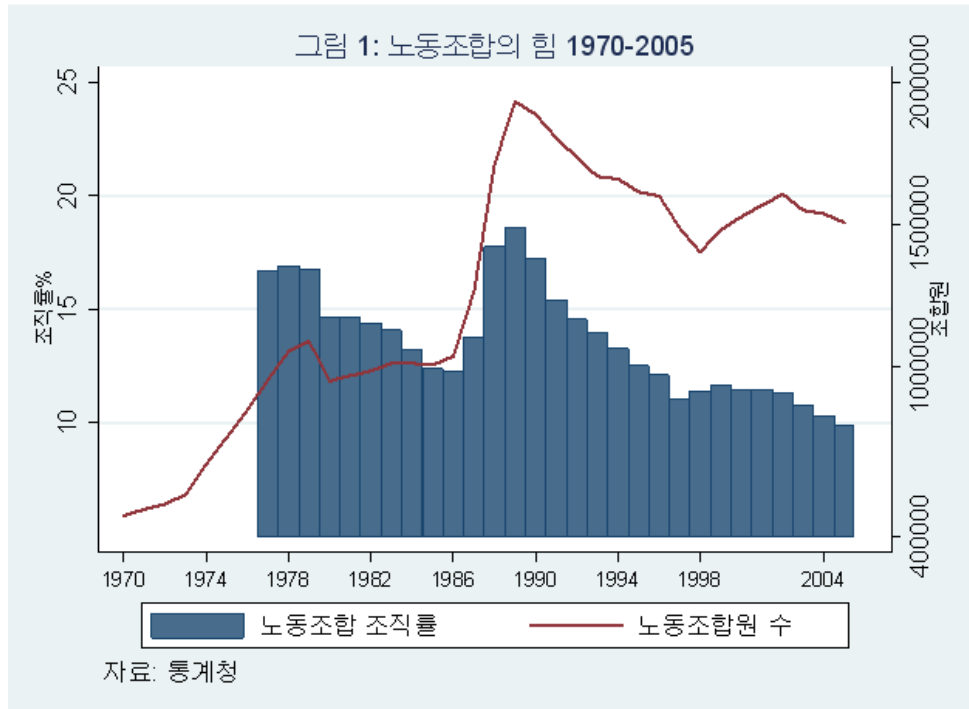


경제위기 이후 한국의 노동: 노동의 노동, 노동의 복지, 그리고 노동의 정치

강명세(세종연구소)

이 글의 목표는 1997년 외환 위기 이후 한국노동이 어떻게 변화했는가를 살펴보는 것이다. 이는 또한 노동에 영향을 주는 환경의 변화에 대해 마찬가지로 고려해야 함을 뜻한다. 노동을 둘러싼 환경조건을 지난 10년 동안 크게 바뀌었다. 본래 노동조합이 대처하려 했던 전통적인 사회적 위험과 아울러 새로운 사회적 위험이 발생하여 노동의 적극적 대응을 필요로 한다. 노동의 노동시장에서의 업적과 정치시장에서의 성과는 노동의 복지에 막대한 영향을 준다. 노동시장에서 임금이나 노동조건을 개선하는 데 실패하면 그만큼 노동의 사회적 복지 수준은 향상할 수 없다. 노조의 입장에서 고용보호는 노동시장의 유연화를 막는 것이다. 노동의 상품화를 완화시키는 고용보호가 없다면 노동의 사회적 임금은 하향하는 것과 마찬가지이다. 고용보호는 입법을 통해 이루어지며 이는 정치시장에서의 지지와 밀접한 연관을 갖는다. 진보정당이 지금보다 훨씬 많은 의석을 향유하는 정당이라면 노동에게 불리한 노동입법은 쉽게 이루어지지 못한다. 노동에게 지난 10년의 변화는 ‘잃어버린 10년’이다. 나는 지난 10년의 변화를 세 가지 각도에서 보고자 한다. 노동시장이 형성된 이래 노동은 노동시장과 정치시장에서의 지위향상을 위해 노력해왔다. 역사적으로 노동계급의 위상은 양대전선에서의 성과에 따라 달라졌다. 결국 최종 성과는 노동의 복지를 얼마나 향상시키느냐 하는 것이다. 이처럼, 노동시장, 정치시장 및 복지의 관계는 시장경제의 정치경제적 맥락 속에서 역동적으로 맺어진다. 이 글은 이와 같은 역동성을 해명하는데 기여할 것이다. 글의 순서는 다음과 같다. 첫째는 노동의 노동 즉 노동이 작업장이나 노동시장에서 지난 10년 동안 얼마만한 성과를 내었는가 하는 문제를 살펴보고자 한다. 두 번째 부분은 한국의 노동이 정치시장 진출에 대한 평가를 하는 작업이다. 대의민주주의 체제에서 정치적으로 대표되지 않으면 노동의 권리는 제도화되지 못한다는 점에서 노동의 정치시장 진출은 핵심적 내용이다. 세 번째는 사회적 안전망에 해당하는 노동의 복지가 어느 정도 수준에 있는가를 탈산업화의 관점에서 살펴보고자 한다. 넷째는 결론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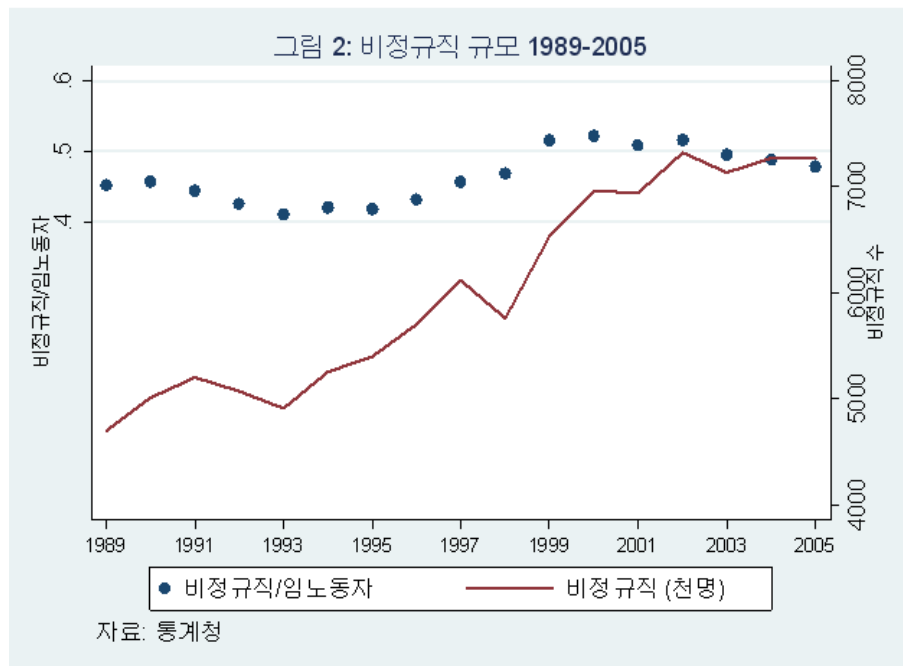
I. 노동의 노동: 위기와 노동의 양극화

상품경제가 출범한 이래 노동은 일차적으로 노동의 상품화를 저지하거나 완화시키기 위해 노력해왔다. 노동의 상품화는 두 가지 층위에서 다른 통로를 통해 진행된다. 첫째 통로는 노동시장이다. 임노동 형성 이후 노동은 단합을 통해 노동의 가치를 더 높이는데 노력했다(Saint-Paul 2000). 노동조합을 결성하여 기업이나 자본에 대해 노동의 가치를 두고 투쟁한다. 단체협약은 임금과 노동조건이 협의되는 대표적 기제이다. 단체협약의 힘은 노동이 노동시장을 어느 정도 장악하고 통제할 수 있는가에 달려 있다. 노동시장에서 상품화가 가장 잘 저지되는 나라는 노동이 잘 단결되어 전국적 수준에서 노동시장을 통제할 수 있는 나라이다. 노동시장에서 노동의 힘(power)을 표현하는데 흔히 이용되는 지표는 조직의 정도 즉 조직률이다. 노동조직률은 전체 노동력 가운데서 차지하는 노동조합원의 비중을 말한다. 사실 노동조직률은 파업에 중대한 영향을 발휘한다. 조합원의 세력이 약하면 당연히 파업을 시도하기 힘들며 시도한다 해도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기 불가능하다.

<그림 1>은 지난 20여 년 동안 한국 노동자들이 얼마나 조직하여 왔는가를 보여준

다. 막대 그래프는 조직률을 말하며 선형그래프는 노동조합원의 수를 뜻한다. 한국의 노동조합은 1987년 민주화 운동의 전환점을 기준으로 큰 변화를 보인다. 민주화 운동이 확산되기 전까지 조직노동운동은 침체상태에 있었다. 1987년까지 조직률이나 절대적 숫자에서는 답보상태에 있었고 조직률은 하락하고 있었다. 이후 민주화의 불길과 동반하여 급상승한다. 1989년 조합원 수는 거의 2백만에 육박하는데 이는 1986년 수준의 2배에 달하는 것이다.

이후 노동의 조직화는 지속적으로 위축되고 있었다. 1989년을 정점으로 조합원 수는 감소세로 돌아섰다. 마찬가지로 23%를 상회했던 조직률은 점차 낮아지기 시작했다. 2004년 현재 12%로 축소되었고 이는 이후에도 회복될 기미를 보이지 않는다. 조직률 하락은 구조적으로 경제불황에 그 원인이 있다.¹⁾ 한국과 같은 기업별 노조 하에서 대량실업으로 신분이 바뀌면서 당연히 조합원 자격을 상실하며 사용자의 기회를 이용하여 노조를 억압하기 때문에 경기 좋을 때에 비해 조합 탈퇴가 일어나기 쉽다.



이처럼 노동은 노동시장에서 일차적으로 성공을 거두지 못하고 있었다. 노동이 노

1) 실업이 노조 조직률 하락을 유발하는 요인이라는 주장은 오래 전부터 지적되었다. Bain and Elsheikh (1976) 참조.

등에서 조직화하는데 실패했다는 것은 본질적으로 노동시장의 양극화에서 잘 드러난다. 양극화의 한쪽에는 소위 대기업 정규직으로 대표되는 인사이드가 그리고 반대편에는 아웃사이드가 존재한다(Lindbeck and Snow1988). 1980년 대 후반 이후 한국의 노동시장은 비정규직이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었다 (그림 2 참조). 1989년 470만 명이었던 비정규직은 전체 고용에서 이미 약 45%를 차지했었다. 이후 비정규직 고용은 계속 늘어나 1997년 위기가 발생했던 당시 약 670만 명을 넘어서고 있었다. 경제위기는 노동시장의 개혁과 더불어 점차 비정규직이 다수를 차지하는 것으로 발전했다. 2005년 730만 명으로 총 고용 대비 48%가 되었다. 물론 노동계 자료에 따르면 이미 50%를 상회했다.²⁾ 경제위기는 노동시장의 밑바닥 층을 강타한다. 대기업 노동자는 비교적 사회적 안전망의 보호를 받지만 중소기업의 노동자와 노인층은 사회적 보호망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한국과 비슷한 대륙형 복지국가에서는 이들 취약층을 표적으로 하여 자산조사 등을 통해 선택적 복지를 제공하려고 한다(Ferrera 2001).

지난 10년 간 한국이 경험했던 노동시장의 변화는 세계적 현상이었다. 정규직, 완전고용, 남성위주의 안정된 고용은 이제 과거의 일이 되었다. 최근의 고용은 장기 실업, 불안정한 일자리, 저임, 빈곤 및 사회적 배제로 특징된다.³⁾ 정규직 대 비정규직의 대립으로 노동의 연대는 더욱 어려운 상황으로 가고 있다.⁴⁾ 노사관계 역시 양극화 현상을 나타낸다. 일반적으로 정규직이 포진한 대기업의 노사관계는 안정적인 것과는 대조적으로 비정규직이 밀집한 중소기업 노사관계는 극히 불안하다. 비정규직 노동은 조직 노동에 의해서 뿐 아니라 국가에 의해서도 배제되고 있다. 노령연금, 의료보험, 실업보험 등 사회보험의 가입율을 비교하면 정규직은 각각 98.1%, 98.4%, 82.9%로 거의 모든 이가 가입되어 있는 반면 비정규직 노동자의 가입율은 각각 33.6%, 34.5%, 31.5%로 정규직 노동자 적용률의 3분의 1 수준이다.⁵⁾

비정규직 문제는 사회적 양극화의 중앙에는 노동의 양극화가 자리하고 있음을 말해준다. 노동운동은 연대를 위해서는 비정규직의 처우개선을 위해 스스로의 이익을 양보하는 전략을 마련하지 않으면 노동 전체의 이익은 사회적 이익으로 전환될 수 없다. 비정규직의 급속한 확산과 더불어 정규직을 대표하는 기존 노동조합은 그 대표성이 위협받고 있다. 비정규직의 85%가 100인 미만의 중소기업 사업장에서 일하기 때

2) 비정규노동센터에 따르면 2007년 전체 임금노동자 15,731천명 가운데 비정규직은 874만천명으로 55.6%를 차지하여 정규직은 698만 7천명(44.4%)보다 월등히 많다.

3) 여러 나라들에서 발생하는 노동시장의 변화와 이에 대한 사회적 보호에 대한 최근 논의는 다음을 참조: Gilbert (2001), Sarfati and Bonoli (200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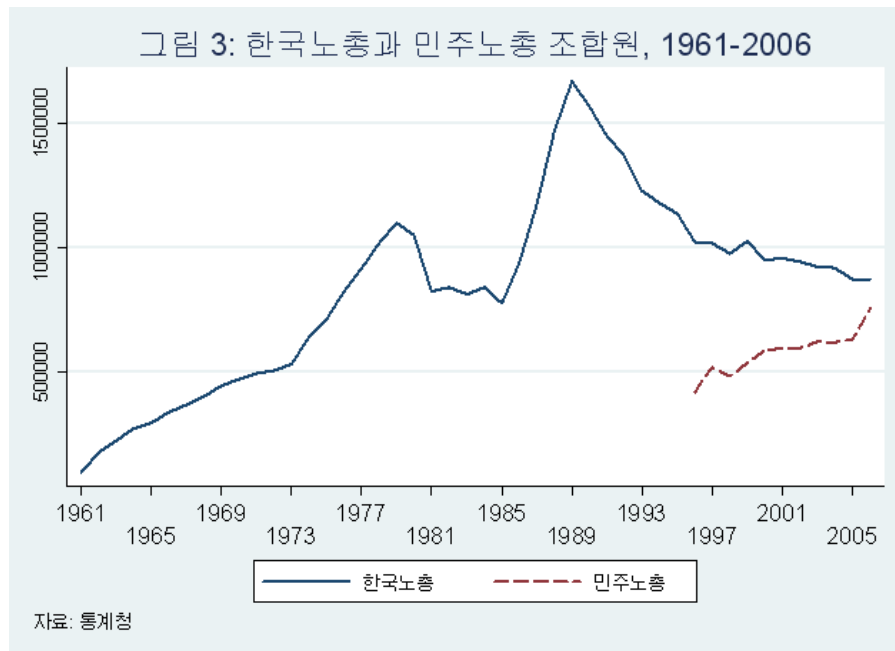
4) 정규직 임금 대비 비정규직의 임금은 2003년 이후 대략 51% 수준에 머물러 임금격차는 사회적 양극화를 심화시키는 요인이다.

5) 사적 복지에 해당하는 퇴직금과 같은 기업복지의 법정 적용을 보면 정규직이 98%인 반면 비정규직은 19.1%로 더욱 심각하다.

문에 조직화에 필요한 인적 및 물적 자원의 부족으로 비정규직 조직화는 2.8%의 미미한 실정이다. 노동은 전체적으로도 노동시장을 지키는데 성공하지 못했을 뿐 아니라 내분에 빠져 있다. 한국노동의 양대 흐름을 형성하는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의 대립은 날이 갈수록 격화되고 있다. 이러한 대립은 양대 노총이 각각 상이한 부문의 노동을 기반으로 하기 때문이다. 대기업 노동자를 기반으로 하는 민주노총과 중소기업 노동자를 근거로 하는 한국노총 사이에 심각한 노선 차이가 드러났다. 민주노총은 지난 10년 동안 산별주의를 최우선의 과제로 내걸었다. 그러나 기업별 노조의 뿌리는 이미 상당히 길게 뻗어 쉽사리 뽑히지 않는다. 민주노총은 민주화 시대의 산물로서 늦게 출범했으나 민주화의 열기를 타고 급속히 성장하여 2006년 75만명을 상회했으며 향후 증가할 전망이다.

반면 2006년 한국노총이 조합원 수에서는 87만 명으로 앞서고 있으나 <그림 3>에서 보는 것처럼 한국노총의 조합원수는 민주화 이후 하락추세에 있다. 지난 수십 년 동안 조합원 수의 감소는 세계적 추세이다.⁶⁾ 양대 노총의 대립은 특히 노사정 기구 등 정부와의 관계에서 가장 분명히 드러난다. 한국노총은 민주노총과는 대조적으로 정부와 협력을 통해 신자유주의적 노사관계를 현실로서 수용하려는 정책을 펴고 있는 반면 민주노총은 노사정 기구를 비토하며 장외 세력으로 남아 있다.

6) 하락의 원인에 대해서는 다양한 요인이 제시되었다. 모든 나라에 공통적으로 적용가능한 요소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첫째, 탈산업화와 사적 서비스 부문의 증대는 제조업 노동이 제공했던 노동조합의 성장을 억제했다. 둘째, 파트타임 노동과 비정규직 증대로 정규직 중심의 노동조합은 타격을 입었다. 셋째, 개인주의의 강력한 대두는 집단적 성향의 노조의 발전과 대립된다. 그러나 국가적 편차를 설명하는 데는 겐트제도와 제도적 요인이 중요하다. 겐트제도는 노조가 참여하여 경영하는 실업보험의 존재를 뜻하며 스웨덴, 덴마크, 핀란드, 벨기에, 노르웨이 등에서 여전히 조합이 건재하게 만든다. 제도주의적 설명에 대해서는 강명세 (2006)과 Western(1997) 참조하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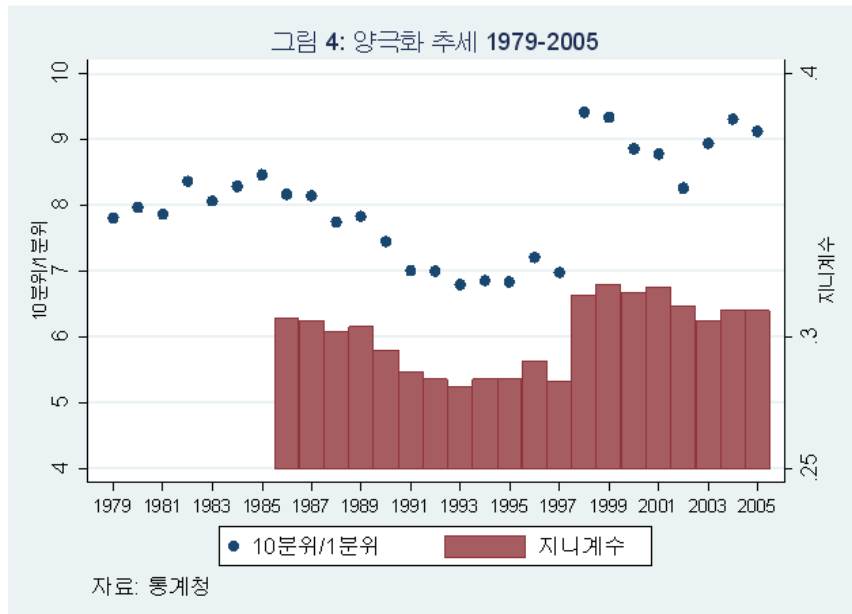


민주노총의 주력은 대기업 노동 특히 금속산업 노동자들을 기반으로 한다. 금속산업 노동자 조합원이 전체 민주노총 조합원의 22%를 그리고 전교조가 12%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들은 안정적 기반을 갖추고 있다. 반면 한국노총의 양대 주력은 금속산업과 서비스업종인 택시노조로서 특히 후자는 노조활동의 안정적 기반이 아니다.

위에서 말한 몇 가지 실패로 인해 외환위기 이후 노동은 위기에 처하게 되었고 사회적 양극화는 더욱 심각해졌다. 현재 한국의 사회적 양극화 현상은 보편적인 현상에 해당한다. 과거 20여 년 전부터 세계는 세계화와 탈산업화의 쌍둥이 변화에 직면해 있다. 이러한 두 가지 변화는 국내적으로 막대한 사회적 영향을 미친다. 지난 10년 가까이 일자리가 줄어들고 비정규직의 대량 발생으로 소득이 감소했다. 과거 중산층에게 접근 가능했던 안정감은 사라지고 중산층은 사회적 양극화의 희생물이 되었다.⁷⁾ 사회적 양극화를 표현하는 소득불평등 지수들은 ‘국민의 정부’와 ‘참여정부’ 하에서 더욱 악화되었다. <그림 4>가 보여주는 것과 같이 지니계수는 과거 정부에 비해 참여정부 집권기인 2004-05년에는 더욱 늘어났다. 서민의 정치를 표방하여 분배를 국정의 제1과제처럼 강조하던 참여정부 하에서 이처럼 소득불평등은 역으로 악화되었던 것이다. 한편 국민의 정부 하에서 하위 10% 계층대배 상위 10% 계층의 상대적 소득

7) 사회적 양극화 논쟁과 더불어 감세 및 감세 논쟁으로 이어진 것처럼 한국사회는 새로운 국면에 처해 있다.

은 감소했으나 지니계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했다.



요약하면 한국의 조직노동은 비정규직으로 대표되는 새로운 사회적 위험에 처해있는 열악한 ‘동료’ 집단을 노조 안으로 통합하지 못한다면 장기적으로 조합원 수 감소로 이어져 그 힘은 크게 약해질 것이다. 이러한 시나리오에서 미국과 같이 양극화가 더욱 심각하게 발전할 것이다. 미국 모델의 취약점에 양극화의 뒤통을 피해가려면 노동조합과 국가는 비정규직을 포함한 새로운 위험에 처한 집단의 포섭에 적극 나서야 할 것이다. 다시 말해서 정규직 노조의 의미있는 양보와 정부의 강력한 사회정책이 요구된다(Ebbinghaus 2006).

II. 노동의 정치시장 진출과 과제

한국노동은 남북분단이라는 구조적 난관 가운데서 끊임없이 정치시장의 문을 두드려왔다. 실제로 한국의 진보정치는 1956년 대선에서 약 24%의 지지를 확보하는 성과를 거두기도 했다. 그러나 이는 보수야당 후보였던 신익희 후보의 사망에 따른 반사이익적 영향이었다. 이승만 대 조봉암 양당 후보로 좁혀진 데 따른 결과였다. 아무튼 반골적 기운은 민주화 향과 결합하여 1960년 박정희의 쿠데타 직전에 치른 5대 총선에서 6.6%의 지지도를 기록하였다. 5대 총선의 결과는 오늘 날까지 노동이 이룩

한 최대의 성과로 기록된다. 이후 노동계 혹은 진보정당은 마의 5% 벽을 한번도 넘지 못했다(그림 5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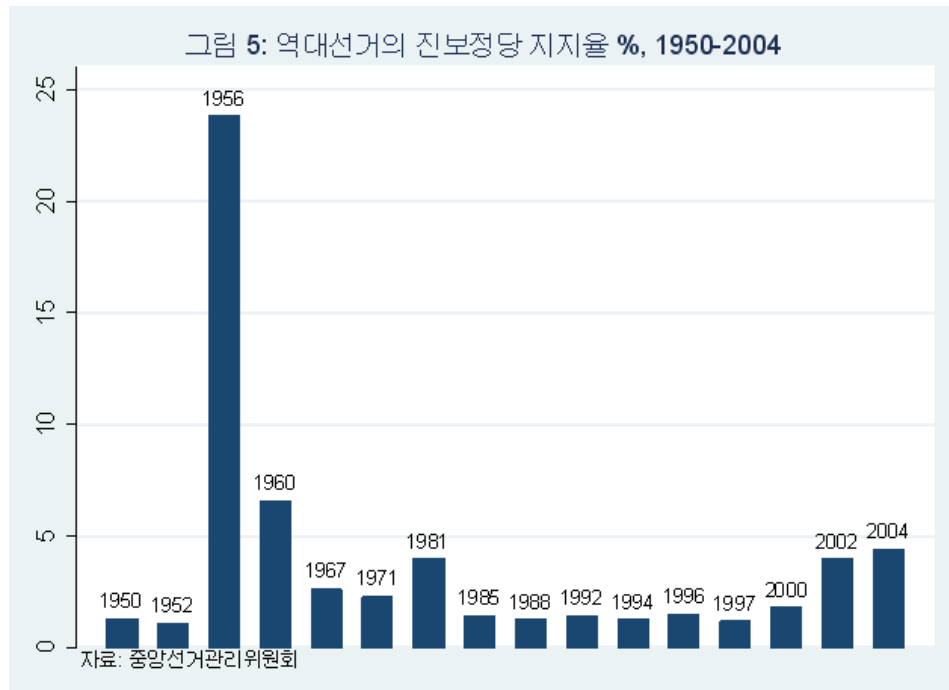


그림 3에서 보는 것과 같이 다수의 노동자가 이미 투표자로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한국에서 진보정당은 노동자의 ‘표심’을 얻지 못했다. 노동의 정치시장 진입을 가로막는 최대의 장벽은 역시 남북분단이다. 남북의 지리적 분단은 한국의 정치지형과 사회지형의 괴리를 구조화시켜 버렸다. 대부분의 선진민주주의 국가에서 역사적으로 경험했던 현상, 즉 계급균열의 정치적 표출은 이 땅에서 존재하지 못했다.⁸⁾ 한국전쟁 이후 남한에서는 보수정부가 장기집권했으며 북한에서는 또 다른 형태의 독재정부가 역시 장기집권했다. 이러한 이념적 대치의 극한 속에서 한국에서 계급정치의 탄생을 불가능한 것으로 만들었다(강명세 2006a). 노동의 조직화는 노동시장 안에서 제한적으로 용인되어 새장 속에 갇힌 모습이었다. 나아가 노조와 노동시장은 기업별로 분자화되어 정치세력화에 필요한 사회적 연대를 이룩할 수 없었다. 노조는 민주화 이후에도 크게 성장하지 못하고 최근에는 노동시장에 대한 지배력도 현저하게 약화되는 단계에

8) 미국 학자들이 끊임없이 제기했던 ‘미국에서 사회당은 존재하지 않았다’는 한국에서 더 날카롭게 제기될 필요가 있다. 이와 관련한 최근의 업적은 고 Lipset (2000)을 참고하라.

있다.

분단과 이념적 대치가 구조적 장벽이라면 정치제도 일반 역시 진보정당의 움직임을 옥죄었다. 단순 다수제 선거제도와 1명을 선출하는 소지역구제도는 소수당 후보에게 절대적으로 불리하게 작용한다. 선거제도의 중요성은 비례대표제를 보완적으로 실시했던 제16대 총선에서 유감없이 나타났다. 지난 총선이 증명하는 것처럼 지극히 부분적 도입만으로도 민주노동당은 10석을 확보할 수 있었다. 과거 1석에 비하면 커다란 발전이 아닐 수 없다. 비례대표제가 본격적으로 도입된다면 진보정당의 앞날은 훨씬 낙관적일 것으로 예측된다.

세 번째 장벽은 지역정당이 독점하는 정당구도 때문이다. 아래 그림 4에서 보듯, 사실 지역당은 사회문제에 있어서는 큰 차별성이 존재하지 않는다.⁹⁾ 독점적 정당구도는 이 체제에서 이득을 보는 정치엘리트의 행위와 전략에 막대한 영향을 미친다. 선거제도가 바뀌지 않는 이유는 기존 지역정당구조에서 비롯된다. 영호남으로 양분된 정치시장에서 영호남을 대변하는 어느 정파도 선거제도의 획기적 변화를 달갑게 생각하지 않는다. 자기 지역에서 독식이 보장된 상황을 왜 바꾸겠는가? 한편 노동정치엘리트는 지난 총선을 경험하면서 선거제도의 변화가 가져오는 효과에 대해 확신하게 되었지만 아직 선거제도 개혁에 올인할 만한 자원과 전략을 갖지 못한 상태이다. 노동엘리트들은 선거제도의 개혁을 주요 담론으로 삼는데 온 힘을 쏟지 않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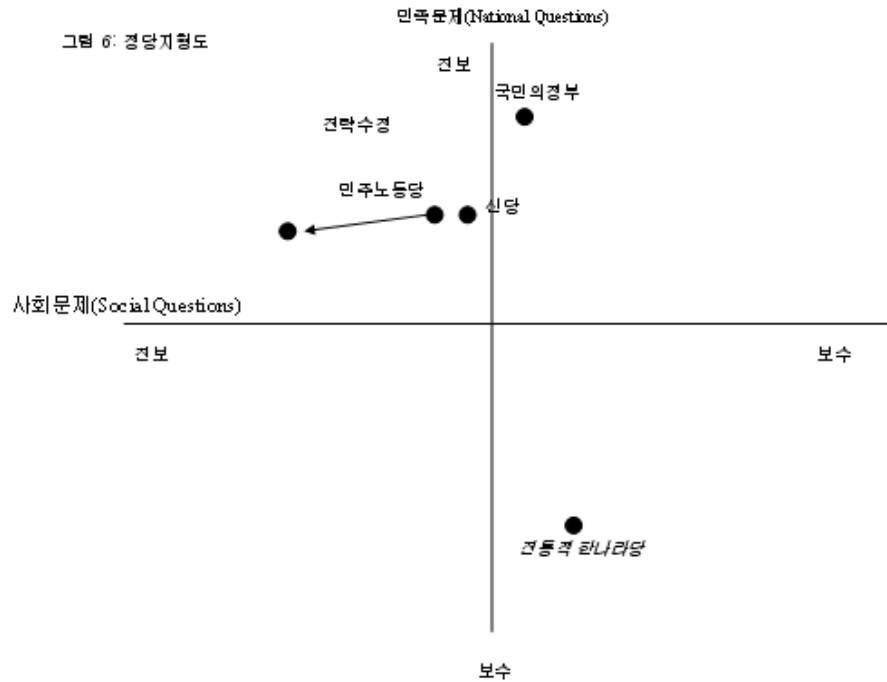
대표적 친노동정당에 해당하는 민주노동당은 또 다른 면에서 전략적 실수를 범했다. 민주노동당이 보여준 그간의 행태를 보면 사회정책의 개발보다는 민족문제(national questions)에 더 많은 관심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 마디로 민주노동당은 노동세력을 대표하는 정치세력임에도 불구하고 ‘이상한’ 진보정당이 되어버렸다. 앞으로 사회문제(social questions)에 특별히 주목하지 않는 한 노동세력의 진의를 대표하기 힘들 것으로 판단된다. <그림 6>에서 본다면 민주노동당은 노동세력의 사회적 이익을 지금보다 적극적으로 보호하고 대변하자면 현재의 지점에서 화살표 방향으로 이동하는 전략으로 수정해야 한다.

더구나 일련의 연구성과는 선거제도는 사회정책의 강도와 긴밀한 상관관계를 갖고 있음을 보여준다. 현재 한국이 취하고 있는 소지역구 제도 하에서 사회적 지출은 지역구 민원해결과 연관을 갖는다면 비례대표제 하에서 사회적 지출은 지역구적 특성을 반영하는 것이 아니라 모두를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보편적 성격이 강하다.¹⁰⁾ 복지수혜층이 일차적으로 노동자 집단임을 생각할 때 비례대표제는 지금과 같은 단순

9) 노무현 대통령의 양당간에 큰 차이가 없다는 언급은 바로 이 같은 점을 지적인 것이다.

10) 이스라엘이나 네덜란드처럼 전국을 하나의 단위로 하는 비례대표제 하에서 정부지출은 미국과는 달리 특정 지역구의 이익을 염두에 둘 수 없다. 계량적 연구에 의하면 사례의 종류와 관계없이 비례대표제 선거제도는 GDP 대비 소득이전이나 사회적 지출은 양의 효과를 갖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대해서는 Milesi-Ferretti, Perotti, Rostagno (2002), Perotti and Tabellini (2003), Alesina and Glaeser (2005) 참고.

다수제 보다 사회정책적으로도 노동에게 유리한 것이다.



요약하면 진보정당이 대선과 총선에서 지금보다 나은 지지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전략적 전환을 이루어야 한다. 민주노동당은 물론 민주노총의 노동엘리트에게는 퍼스펙티브의 전환이 요구된다. 하나는 선거제도를 사회적 소수의 진입에 유리한 제도로 바꾸는 데 총력을 경주해야 한다. 대의민주주의 체제에서 당파성은 부의 재분배에 중대한 영향을 준다. 그리고 당파성은 다시 선거제도에 의해 만들어진다. 이에 관련된 연구는 좌파 정부는 비례대표제에서 더 오래 그리고 대조적으로 우파 정부는 단순다수제에서 더 오래 집권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Iversen 2005, 155-162). 즉 선거제도는 당파성의 기제를 통해 사회정책에 영향을 주는 것이다. 두 번째는 사회적 평화를 이루는 방법을 모색하는데 모든 자원을 투입해야 한다. 비정규직 문제를 위시로 하여 노동시장의 다수를 이루지만 사회적 처우를 받지 못하는 집단을 위한 사회정책을 제시하는데 정책적 우선순위를 두어야 한다. 사회통합적 정책을 개발해야 할 것이다. 또한 비례대표제는 노동자의 복지에 더욱 우호적인 선거제도라는 점에서 한국 노동은 선거제도의 개혁에도 힘을 쏟을 필요가 있다.

III. 노동의 복지와 정치경제

금융위기 이후 한국 노동자에 닥쳐온 가장 혹독한 경험은 노동시장의 불안정이다. 한국 노동자가 누렸던 유일한 ‘복지혜택’였던 안전한 직장이 사라져 버렸다는 것이다. 적어도 대기업 노동자에게는 선진국 버금가는 ‘복지’ 아닌 복지가 주어졌었다고 하겠다. 그러나 이 같은 혜택은 중소기업 노동자나 농민에게는 접근되지 않았다.

노동과 복지의 연계라는 관점에서 보면 위와 같은 한국의 대응은 한국복지국가의 성격을 대변해준다. 한국이 채택하고 있는 비스마르크 사회복지는 위기가 닥치면 일차적으로 노동력 퇴출에 의존한다. 당연히 퇴출에는 사회적 지출의 증가가 뒤따른다. 비스마르크 복지국가는 세 가지 특징을 갖는다. 첫째, 급여는 잠재적 수혜계층이 납부한 기여에서 나온다. 가입자의 납부실적이란 점에서 사회보험은 일종의 권리로서 인식된다.¹¹⁾ 둘째 급여는 사회적 기여에 기반하는 재정방식이다. 셋째, 복지제도의 운영주체는 노사정 등 사회적 동반자이다. 이 세 가지 특징 가운데 세 번째를 제외하면 한국의 복지제도는 비스마르크 모델에 속한다. 한국의 복지는 보편적 조세가 아니라 가입자의 보험료에 의해 그 재정기반이 마련된다. 실업보험도 예외는 아니다.

<표 1> 노인(65이상)의 취업률 % 1960-2003								
	1960-70		1975		1980		2004	
	남성	여성	남성	여성	남성	여성	남성	여성
독일	17.1	6.0	6.8	4.6	6.8	3.2	4.4	1.7
프랑스	22.8	9.0	13.7	5.7	8.3	3.4	1.7	0.8
이탈리아	9	2.6	7.3	2.1	8.4	2.8	5.8	1.2
네덜란드			7.9	1.7	4.7	0.9	5.9	1.9
일본	57.2	22.8	4.3	15.2	40	15.5	28.3	12.8
한국					44.7	16.9	40.9	22.1
스웨덴	42.2	10.9	14.2	5.9	14.2	3.8	12.5	6.1

11) 손필드(Schonfield 1964)는 비스마르크 유형으로 분류되는 프랑스 사회보험의 특징을 다음과 같이 설명하였다. 프랑스 노동자가 평상시 납부한 사회보험의 기여는 그들로 하여금 고용이 불안정하게 되면 소득을 보전하는 수단으로서 작업장에서 얻은 ‘유사 재산권’으로 각인되었다.

영국					7.9	2.9	8.5	3.9
미국	40.5	15.6	20.4	7.8	18.3	7.8	18.2	10.7
자료: OECD Employment Outlook								

1997년 금융위기로 촉발된 경제적 위기는 한국이 직면했던 탈산업화와 세계화의 현상이다. 탈산업화와 세계화는 지구상의 모든 국가에 영향을 준다. 오직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이다. 최근 선진국 복지국가는 새로운 사회적 위험(new social risks)에 대처하고 있다. 그 방향이나 정도는 국가별로 다를 뿐이다. 20세기 사회적 위험은 일반적으로 산업노동자의 노동에 수반되는 것이었다. 노동력 상실이나 약화 그리고 시장경제의 수급불안으로 인한 위험 즉 노령화, 산업재해 및 실업 등이 전통적 사회적 위험에 해당한다. 고령화 사회에 진입함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정책은 서로 같지 않다. 이는 노인고용의 차이에서 잘 나타난다.

한편 20세기 끝날 무렵 등장한 새로운 사회적 위험은 탈산업화의 산물이다. 새로운 사회적 위험은 자본주의의 고도화 단계에서 나타나는 산업구조의 재편에서 비롯된다. 가족구조와 노동시장의 변화와 관련된 사회경제적 변화로 인해 발생하는 사회적 위험들이며 초기 산업화 단계에서는 존재하지 않았었다. 예를 들어 가족정책이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에 소요되는 사회적 지출은 대표적인 새로운 사회정책이다. 탈산업화는 전통적 제조업 부문이 줄어들고 새로운 서비스 부문의 확장을 뜻한다. 따라서 서비스 부문의 고용은 탈산업화의 정도를 의미하는 지표로 활용된다. <그림 7>에 의하면 한국은 급속한 산업화의 결과 불과 40년 만에 서비스 산업의 고용은 미국이나 스웨덴 보다는 낮으며 독일이나 일본수준에 가까운 64%를 넘어선다. 그러나 서비스 부문의 팽창은 새로운 사회적 위험의 확산을 뜻한다는 점에서 제조업 시대의 사회적 위험을 처리하는데 적합토록 설계된 한국의 복지국가에게 더 없는 부담이 된다. 1969년 한국의 서비스 고용의 비중은 30%에 불과했다. 같은 해 일본의 그것은 46%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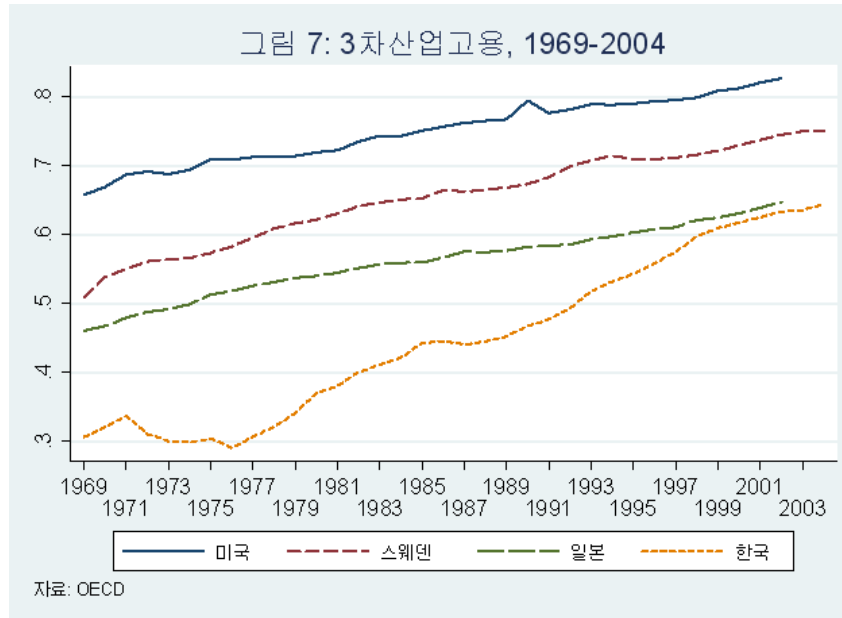


표1은 9개국을 대상으로 하여 65세 이상 노인층의 취업률(고용/인구)을 시기별로 나타낸 것이다. <표 1>이 보여주는 것과 같이 노인의 노동시장 참여는 국가별로 커다란 편차를 갖는다. 또한 노인층의 취업은 성별로도 서로 크게 다르다. 전반적으로 모든 나라에서 노인의 취업률은 지속적으로 낮아지고 있다. 소득증가와 더불어 노인의 경제활동은 축소되는 것임을 말해준다. 역사적으로 선진국 가운데서는 스웨덴에서 노인의 취업이 가장 활발하였다. 2004년 현재 가장 낮은 비율을 보여주는 국가는 유럽 대륙의 비스마르크 복지체제이다. 독일, 이탈리아, 프랑스 및 네덜란드 등의 노인취업은 가장 낮다. 이들 국가들은 실업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조기은퇴에 의존했기 때문에 노인의 취업은 낮아졌다. 한편 한국의 노인취업은 남성이 44%, 그리고 여성이 22.1%로서 9개국 가운데 가장 높으며 그 뒤를 이어 일본과 미국이 있다. 한편 복지체제 가운데 가장 노동의 상품화를 억제하는 것으로 평가되는 스웨덴의 경우 남성노인은 12.5%, 여성노인의 취업률은 6%로서 중간 위치를 차지한다. 스웨덴 복지국가는 가능한 한 완전고용정책을 추구하고 이를 복지정책의 근간으로 삼아 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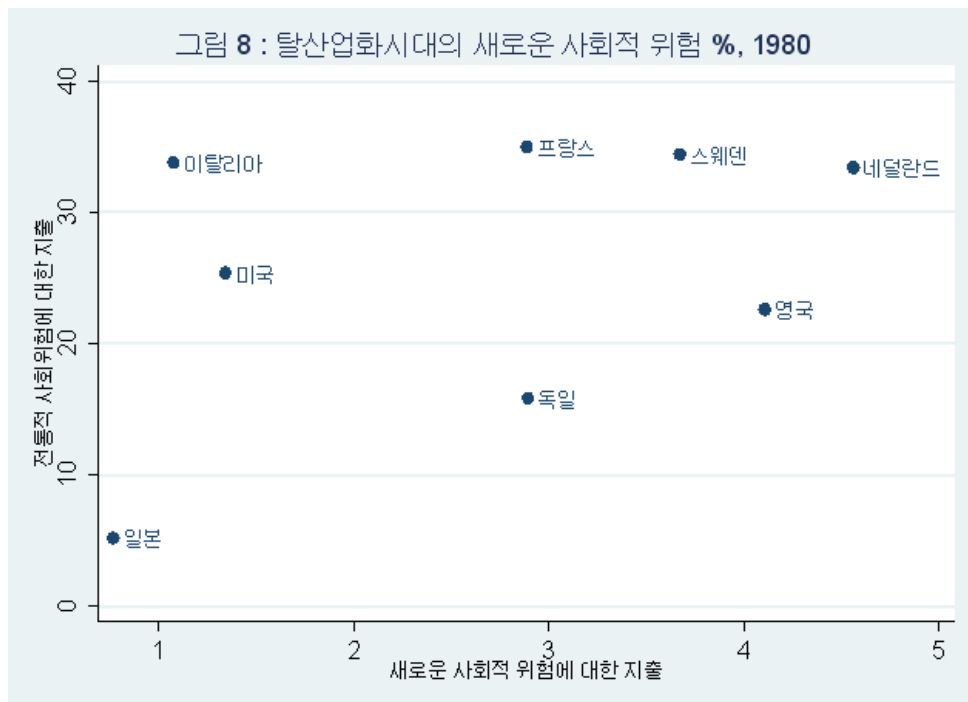
〈표 2〉 15-64세 인구의 취업률 % 1960-2003								
1960-70		1975		1980		2004		
남성	여성	남성	여성	남성	여성	남성	여성	

독일			84.7	47.3	83.9	50	73.8	62.8
프랑스	86.1	45.9	83.9	50	82.1	52.3	72.4	60.4
이탈리아			80.3	28.5	79.7	34.2	73.5	47.8
네덜란드			62.8	21.7	60.5	25.2	82.1	66.4
일본	87.3	53.8	87.1	49.3	86.4	52.4	83.2	59
한국					79.1	45.2	79.1	53.7
스웨덴	90.5	53.2	88.9	67.6	88.1	74.7	77.6	74.1
영국							80.8	68
미국	86.9	39.6	81.4	48.7	82	56.1	79.5	66.8
자료: OECD Employment Outlook								

탈산업화의 위험에 가장 잘 대응한 국가들은 스칸디나비아 국가들인데 그 이유는 이들이 발전시킨 초기 복지국가의 후기산업사회의 노동시장과 가족구조에 더욱 적합했기 때문이다(Armingeon and Bonoli 2006). 20세기 초 이들 나라들에서는 농민과 노동자가 연대하여 만든 복지국가는 조세재정을 기반으로 하는 보편주의적 성격을 갖는다. 그런데 이러한 보편주의 복지제도는 20세기 말 보편화된 비정형의 직업경력을 가진 노동집단을 보호하는데 특히 적합했다(Hort 2006). 스웨덴 사회정책의 방향은 여성의 취업률에서 잘 드러난다. 표 2에서 보듯이 남녀의 고용은 나라별로 커다란 차이가 있다. 2004년 현재 이탈리아 여성의 고용률은 불과 48%에 불과한 반면 스웨덴의 고용은 74%를 넘는다. 반면 이탈리아 남성의 고용(73%)과 스웨덴 남성의 고용(77%)은 큰 차이가 없다. 여성의 취업은 가족구조의 문제와 밀접한 연관을 갖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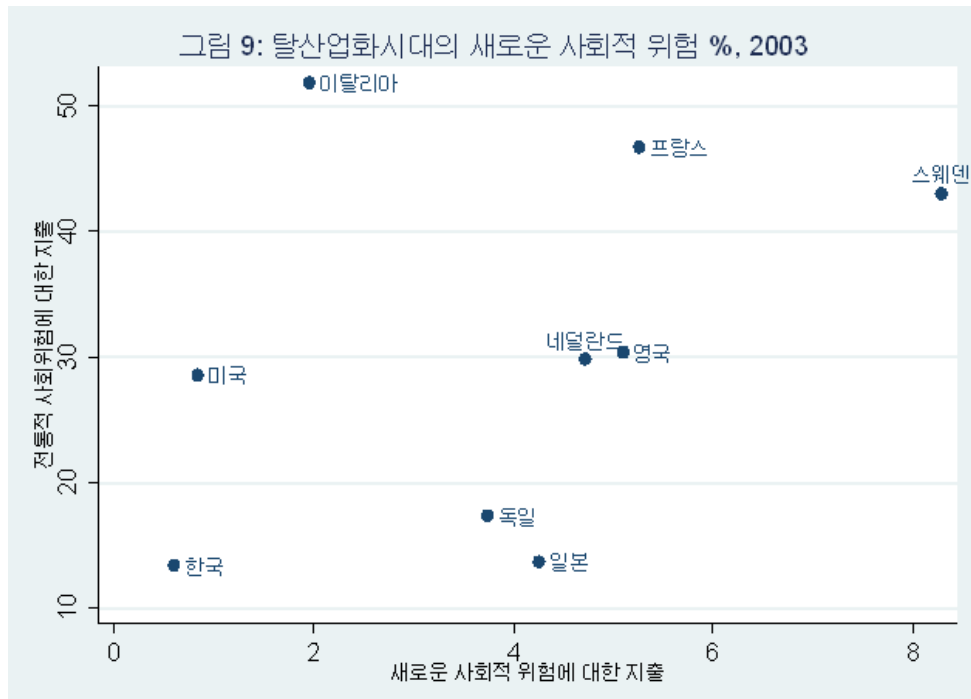
20세기 후반 들어 가장 혼자의 소득만으로는 가족복지가 향상되기 힘들게 되었다. 맞벌이 부부가 많아지고 이는 가구의 소득증대 그리고 복지를 향상시켰다. 이는 다시 나중에 일하는 국가의 복지재정을 견실화하는 동시에 여성의 노후복지에도 기여할 것이다. 그러나 일과 가정을 역할을 동시에 충족시키는 것은 쉽지 않으며 정책적 배려가 필요하다. 육아정책의 지원이 없다면 일을 하는 여성은 자녀양육을 포기하기 쉽다. 여성의 자기 실현은 물론이고 소득증대에도 기여하지만 여건 때문에 일을 포기해야 한다면 그렇지 않을 때 보다 빈곤의 덫에 걸리기 쉽다. 여성의 경제활동참여는 적극

적인 가족정책이 뒷바침되지 않으면 쉽지 않다. 전통적으로 여성 특히 주부는 육아와 노인돌보기 등 가정을 뒷바라지 역할을 해왔기 때문에 여성이 이제 노동시장으로 진출하면 여성의 몫은 국가나 혹은 시장이 맡아야 한다. 스웨덴에서는 국가가 그리고 미국에서는 저임의 노동이 과거 여성이 수행했던 가정 일을 대신했다. 따라서 육아 및 탁아 그리고 노인서비스에 대한 배려는 가족정책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



<그림 8>와 <그림 9>은 각각 1980년과 2003년 9개국에서 일어난 사회정책의 방향전환을 보여준다. 그림의 수평 및 수직축은 국민총생산 대비 각각 새로운 사회적 위험과 전통적 사회위험에 대처하기 위한 사회지출을 뜻한다. 1980년은 아직 새로운 사회적 위험이 크게 부각되지 않았을 시점이다. 당시 네덜란드는 전통적 사회정책뿐만 아니라 새로운 위험에 가장 많은 지출을 한 것으로 나타난다. 스웨덴 역시 적극적으로 새로운 사회정책을 개발한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일본은 가족정책이나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에서 가장 인색하였다. 한편 이탈리아는 전통적 사회정책에는 관대하지만 새로운 위험에는 소홀하였다. 이러한 지도는 탈산업화가 20년 이상 경과된 2003년에는 어떠한가? 변화에 대한 것은 <그림 9>이 보여준다. 이탈리아는 여전히 전통적 사회정책의 범주에서 벗어나지 않았다. 스웨덴은 가족정책과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에

가장 많은 지출을 하였다. 한편 네덜란드는 1980년과는 달리 탈산업화가 본격화된 이후 새로운 사회정책에 그리 많은 배려를 하지 못한 것으로 평가된다. 한국은 1980년 자료와 비교할 수 없으며 2003년 아직 산업노동자에 대한 배려는 물론이고 청년실업, 노인빈곤, 여성노동 등에 대해 가장 인색하다.



사회복지에 대한 한국의 인색함은 한국 복지국가의 성격에 잠재해 있다 (embedded). 경제위기가 닥치기 전까지 한국의 노동조합은 기업별로 분열되어 현직에 있는 조합원의 권리를 위해 노력했다. 가족 임금 은 대표적인 조합원의 권리이다. 노조의 주력부대는 교원노조가 결성될 때까지 제조업 그 중에서도 수출부문의 대기업이 집중된 금속산업 노동자들이었다.

경제위기 직전까지 한국의 노동, 대기업 정규직 노동은 다양한 사회적 혜택을 부여 받았다. 대기업은 특히 ‘가족 임금(family wage)’을 제공하여 기업의 생산성 향상에 필요한 ‘자발적 헌신’을 요구했다. 가족임금은 고용과 더불어 발생하는 급여이다. ‘봉급’와 함께 정규직 노동에게 따라오는 사회적 급여가 존재했던 것이다. 정규직 남성이 장은 기여를 통해 가족의 복지를 책임졌다. 그러나 탈산업화와 더불어 한부모 가정이 증가했는데 이들 가정은 그 가장이 일자리와 가정의 두 가지 역할을 잘 조화시키지

못하면 빈곤의 늪에 빠지기 쉽다. 일자리를 통해 소득을 만들려면 가정이 요구하는 역할을 누군가가 대신해주어야 하는 것이다. 미혼 자녀를 둔 한 부모 가정이 전체 가구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975년 10.1%에서 점차 감소하다가 위기 이후 다시 증가하여 2005년에는 11%로 늘어났다 (<표 3> 참조). 또한 아이를 낳지 않는 부부의 비중은 1975년 5%에서 2005년에는 무려 18%로 급증했다. 이와 같은 자녀없는 가정의 증가는 육아를 포함한 가족정책이 부실하기 때문이다.

<표 3> 가족구성 % 1975-2005			
	부부	부부와 미혼자녀	한부모와 미혼자녀
1975	5.0	55.6	10.1
1980	6.4	56.5	10.0
1985	7.8	57.8	9.7
1990	9.3	58	8.7
1995	12.6	58.6	8.6
2000	14.8	57.8	9.4
2005	18.1	53.7	11.0
자료: 한국의 사회지표 2006 (통계청)			

그런데 문제는 한 부모, 노인층, 청년실업 등을 포함하는 사회적 위험에 노출되기 쉬운 집단은 조직화되기 힘들며 따라서 정치적으로 한 목소리를 내기 어렵다는 점에서 정치적으로 대변되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청년실업은 여타 연령의 실업에 비해 몇 배 이상 높은 실정이고 이는 앞으로도 쉽사리 개선될 기미가 없는 세계적 현상이다 (<표 4> 참조). 한국의 복지체제는 노동시장 안에 안주하는 인사이드들에 대한 보호를 위해 설계되었기 때문에 새로운 사회적 위험에 직면한 집단들에 대해서 소홀하다. 친노동 정치는 바로 이들의 사회적 권리를 대변하는데 그 초점을 두어야 한다.

<표 4> 청년실업률 % 2000-2006				
	평균	15-19	20-24	25-29

2000	4.4	14.5	7.5	9.9
2001	4	14.4	7.3	9.3
2002	3.3	12.1	6.6	7.9
2003	3.6	13	7.7	9.6
2004	3.7	14.1	7.9	9.9
2005	3.7	12.5	7.7	9.9
2006	3.5	10.4	7.7	9.9

탈산업화와 세계화의 급속한 진행과 함께 새로운 사회적 위험은 더욱 심각하게 발현하고 있다. 비정규직의 만연, 청년실업의 장기화, 여성노동의 진입과 이에 따른 빈곤화 문제의 발생, 노인서비스 향상 등은 사회적 양극화를 심각하게 만든다는 점에서 사회통합의 또 다른 새로운 장애물이 되고 있다. 새로운 위험에 노출된 집단은 정치적으로 어느 세력에 의해서도 진지하게 대표되지 못한다는 점에서 제도적으로 사회적 배제의 덩어리에 빠진다. 젊은 층의 낮은 투표율에서 나타나듯, 이들 집단은 물적 및 시간적 자원과 정보가 부족하기 때문에 투표장에 가지 않을 가능성이 많다. 정치엘리트는 정치적 무관심층에 주목하지 않는다. 과거 사회적 통합을 방해한 것은 노사정 등을 포함한 전통적 노사관계의 영역이었으나 이제 새로운 사회적 위험의 발생으로 통합의 대상이 전혀 바뀌었다.

이제 노동과 국가는 사회적 통합을 달성하기 위해 새로운 위험에 대한 대응과 기존의 사회적 위험에 대한 정책을 적절하게 조화해야 한다. 그러나 비정규직에 대한 노조의 미온적 대응을 고려할 때 새로운 위험을 처리하는데 노조의 적극적 역할을 기대하기는 어렵다. 남은 것이 있다면 정부의 보다 정치적 역할이다. 정부의 역할과 관련 최근 아일랜드 정부의 정책은 좋은 교훈을 제공할 수 있다.¹²⁾ 아일랜드는 경제개혁 과정에서 다양한 사회적 이익을 포섭하는데 성공하여 ‘기적’을 만들었다. 아일랜드 정부의 사회적 동반자 정책은 개혁 초기에는 노사 및 농민 등 전통적 사회적 동반자 집단에 한정하였던 것을 점차 개방하여 사회적 소수를 포함한 비정규직 부문을 포함함으로써 경제재건에 필요한 사회적 통합에 성공할 수 있었다. 동반자관계의 사회적 기반을 확장한다는 차원에서 정부는 공동체와 자발적 시민단체, 실업자, 여성집단, 교회

12) ‘아일랜드의 기적’에 대한 문헌으로 다음을 참조하라: Daly (2005), Hardiman (2000), O'Donnell (2000).

등을 사회적 동반자로 수용하였다. 아일랜드 사회협약은 사회의 다양한 많은 이해를 참여시킴으로써 정치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을 극복하는데 기여했다. 정치에 대한 불신은 지구적 현상이다. 나아가 한국의 노사정 협약은 제도는 존재하지만 기능이 멈춘 식물인간 상태이다. 네덜란드 노사정도 한 때 휴면상태에 있었으나 네덜란드 정부가 사회협약을 재활성화시켜 ‘네덜란드 기적’을 만든 바 있다¹³⁾ (강명세 2006a). 한국 정부도 어느 나라보다도 높은 정치불신을 감안할 때 다양한 사회적 이해를 포함하는 새로운 협약을 시도해 볼 직하다.

IV. 결론

1997년 금융위기로 인해 한국노동은 민주화 이후 최대 타격을 받았다. 기업별 노동시장에서 사업장에서의 방출은 곧 조합원 자격의 상실로 이어져 노동시장에서의 지배력을 극도로 약화되었다. 금융위기 상황에서 ‘강제된’ 대타협은 노동시장을 유연하게 만들어 결국에는 비정규직 양산을 유발하는 계기가 되었다. 세계적 경쟁체제가 격화되면서 기업은 생산성 향상을 위해 노동의 희생에 의존했기 때문이다. 비정규직의 대량탄생은 한국의 노동을 양분시켰다. 노동시장은 대기업-정규직 대 중소기업-비정규직의 대립으로 양분되었고 이는 다시 사회적 양극화를 심화시켰다. 지난 10년 동안 전국적 조직노동은 두 가지 과제에 직면해 왔다. 하나는 바로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문제이다. 노동이 하나의 목소리로 연대하여 집단적 힘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내적 분열을 해소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지난 10년의 경험을 보면 기업별 노조구조가 정착된 한국 노동시장에서 연대를 주도할 권위를 만들기는 어려워 보인다. 노동시장의 외부자(outsider)인 비정규직 노동을 배려하려면 내부자(insider)에 해당하는 정규직의 헌신을 전제로 해야 하는데 기업별 노조에서는 불가능하다. 다른 하나의 과제 역시 임금협상을 주도하고 있는 대기업-정규직 노조의 결단이 필요하다. 이 것은 다름 아니라 새로운 사회적 위험에 노출된 집단에 대한 사회적 보호를 강화하는 문제이다. 한국의 복지체제는 대기업-정규직 노동자를 그 보호대상을 설정하고 짜여졌다. 사회보험의 기여와 급여는 사회적 연대를 원칙으로 하지 않고 가입자의 지난 노동시장 경력을 그대로 반영하려 한다. 그러나 탈산업화와 세계화가 급속히 진행하면서 과거에는 드러나지 않았던 새로운 위험이 발생하고 있다.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와 청년실업

13) 네덜란드 기적을 이끌었던 것으로 평가되는 바세나르 (Wassenaar) 협약은 정부의 개입이 아니라 간접적 협박에 의해 가능했다. 개입의 가능성이 높아지자 노사는 자율협약에 돌입하게 되었던 것이다. 이 점에서는 스웨덴의 1938년 살프요바덴 협약도 마찬가지로 정부개입을 선제적으로 막기 위해 자율적으로 이루어졌다. 네덜란드의 기적에 대해서는 다음 참조: Visser and Hemerijck (1997), Hassel(2006).

의 증가 그리고 이와 관련된 노인복지문제는 전통적 복지제도가 염두에 두지 않았던 영역이다. 한국의 노동은 실업보험과 노령연금 등 전통적 복지는 물론이고 새로운 사회적 위험에도 대처해야 하는 이중의 부담을 떠안고 있다. 새로운 위험의 발생은 동시에 국가가 책임져야 할 몫이다. 정부는 사회정책의 시선을 바꿔 새로운 사회적 위험에 노출된 집단의 복지향상에 더욱 힘써야 한다. 나아가 비정규직 등이 노동자의 다수를 점한다면 정부의 공공정책은 다수의 복지증진을 위해 노력해야 하며 이에 부응하지 못하는 것은 선거제도의 탓도 있다. 1인을 선출하는 소선거구제와 단순다수대표제 하에서 정부예산은 전국적 이해와 관련된 문제의 해결보다 특정 지역구 현안을 표적으로 하여 사용되기 쉽다. 새로운 사회적 위험에 처한 이들의 복지를 증진하려면 이들의 이익을 보다 잘 대변할 수 있는 정당이 더 많은 의석을 획득할 필요가 있다. 그 방법은 비례대표제이다.

한국의 높아가는 비정규직 규모를 감안할 때 한국의 사회정책은 비정규직의 복지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 그러나 한국의 전통적 사회정책은 본래 노동시장 내의 정규직을 보호하기 위해 경향이 강하기 때문에 새로운 복지수요를 충족시킬 수 없다. 노동조합 역시 정규직 중심으로 구성된다는 점에서 비정규직 동료를 배려하지 않는다. 결국 비정규직에 대한 사회적 보호는 국가가 나서야 할 일이다. 탈산업화가 더욱 발전할수록 탈산업화의 피해자인 비정규직, 청년노동, 여성노동, 빈곤층 등을 보호할 필요가 발생한다. 이들은 산업화 시대에는 존재하거나 했더라도 크지 않았기 때문에 사회적 주목을 끌지 못했으나 이제는 상황이 완전히 반전되어 가장 보호를 필요로 하는 집단이며 그 수적 비중 역시 압도적이다. 서구에서 이들에 대한 보호는 중앙단위에서 행해지는 단체협약이나 정부의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에 의해서 이루어졌다. 단체협약은 빈곤임금을 방지하기 위해 전국적 단위에서의 최소한의 수준을 설정하며 노동시장정책은 장기실업이나 사회적 배제를 방지하는데 역점을 둘 필요가 있다.

<참고문헌>

- 강명세 2005 "비교적 관점에서 본 한국의 노동시장제도와 경제성과," 심지연 강명세 편, *강소국의 생존전략*(백산).
- 강명세 2006a 한국의 노동시장과 정치시장 (백산)
- 강명세 2006b 세계화와 탈산업화 시대의 노동과 복지의 정치 (한울).
- 마인섭 1998 "참여와 발전의 노동정책: 1998년 노사정 합의를 중심으로" *사회과학* 제 1호, 37-40.
- Alesina, A. and Glaeser, Edward L. 2005 *Fighting Poverty in the US and Europe: A World of Difference* (Oxford).
- Armingeon, K. and Bonoli, G., eds. 2006 *The Politics of Post-Industrial Welfare States: Adapting post-war social policies to new social risks* (Routledge).
- Bain, G. S. and Elsheikh, F. 1976 *Union Growth and the Business Cycle* (Oxford).
- Bonoli, Giuliano 2007 "Time Matters: Postindustrialization, New Social Risks, and Welfare Adaptation in Advanced Industrial Democracies," *Comparative Political Studies*, 40:5, 495-520.
- Bonoli, Giuliano and Palier, Bruno 2007 "When Past Reforms Open New Opportunities: Comparing Old-age Insurance Reforms in Bismarckian Welfare Systems," *Social Policy and Administration*, 41:6, 555-573.
- Daly, Mary 2005 "Recasting the Story of Ireland's Miracle: Policy, Politics or Profits," in Uwe Becker and H. Schwartz, eds., *Employment 'Miracle': A Critical Comparison of the Dutch, Scandinavian, Swiss, Austrian and Irish Cases Versus Germany and the US* (Amsterdam University).
- Ebbinghaus, B. 2006 "Trade union movements in post-industrial welfare states: opening up to new social risks," in Armingeon, K. and Bonoli, G., eds. 2006 *The Politics of Post-Industrial Welfare States: Adapting post-war social policies to new social risks* (Routledge), 123-142..
- Esping-Andersen, G. 2002 *Why We Need a New Welfare State* (Oxford).
- _____ 1999 *Social Foundations of Postindustrial Economies* (Oxford).
- Esping-Andersen, G., Gallie, D., Hemerijck, A. and Myles, J. 2002 *Why We Need a New Welfare State* (Oxford).
- Ferrera, Maurizio 2001 "Targeting Welfare in a 'Soft' State: Italy's Winding Road to Selectivity," in Neil Gilbert, ed., *Targeting Social Benefits: International Perspectives & Trends* (Transaction), 157-186.
- Gilbert, Neil and Van Voorhis, R. A., eds. 2006 *Changing Patterns of Social Protection*(Transaction).
- Hardiman, N. 2000 "Social Partnership, Wage Bargaining and Growth", in B. Nolan, P. J. O'Connell and C. T. Whelan, eds., *Bust to Boom? The Irish Experience of Growth and Inequality* (Institute of Public Administration).
- Hassel, Anke 2006 *Wage Setting, Social Pacts and the Euro: A New Role for the State*(Amsterdam University).

- Hort, Sven E. O. 2006 "Back on Track – To the Future? The Making and Remaking of the Swedish Welfare State in the 1990s," in Gilbert, Neil and Van Voorhis, R. A., eds. 2006 *Changing Patterns of Social Protection* (Transaction), 239–276.
- Iversen, T. 2005 *Capitalism, Democracy, and Welfare* (Cambridge).
- Kitschelt, H., et. Al. eds. 1999 *Continuity and Change in Contemporary Capitalism* (Cambridge).
- Lipset, S. M., and Gary Marks 2000 *It Didn't Happen Here: The Failure of Socialism in America* (W. W. Norton).
- Milesi-Ferretti, G., Perotti, R., and Rostagno, M. 2002 "Electoral Systems and Public Spending," *Quarterly Journal of Economics*, 117, 609–58.
- Perrson, T. and Tabellini, G. 2003 *The Economic Effects of Constitution* (MIT).
- Pierson, Paul 1994 *Dismantling the Welfare State: Reagan, Thatcher, and the Politics of Retrenchment* (Cambridge).
- 1998 "The Politics of Pension Reform," in K. G. Banting and R. Broadway, eds., *Reform of Retirement Income Policy: International and Canadian Perspective* (Queen's University), 272–93.
- Saint-Paul, Gilles 2000 *The Political Economy of Labour Market Institutions* (Oxford).
- Sarfati, H. and Bonoli, G. 2002 *Labour Market and Social Protection Reforms in International Perspective: Parallel or converging tracks?* (Ashgate).
- Schonfield, Andrew 1964 *Modern Capitalism* (Oxford).
- Weaver, K. 1986 "The Politics of Blame Avoidance," *Journal of Public Policy*, 6:4, 371–98.